

**어린이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

**2024년 2월**

#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 : 조지아대학교  
(University of Georgia)

3. 훈련분야 : 안전

4. 훈련기간 : 2023. 2. 3. ~ 2024. 1.31.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

-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 질식사고, 수영장 사고, 놀이기구 멈춤 사고, 급식 식중독 사고, 질소 과자 사고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
  - 통계청이 발표한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에 따르면 정부 여러 시책의 효과로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2015년 3.1명에서 2020년 2.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 여전히 영국 2.0명, 노르웨이 1.1명(2015년) 등 OECD 주요국의 수준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 수준을 보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

(자료 통계청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단위 :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4세 이하 인구(천명)	7,151	6,982	6,844	6,701	6,541	6,381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	225	196	196	163	167	150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	3.1	2.8	2.9	2.4	2.6	2.4

\* 자살·타살(의도적 사고)을 제외한 운수·추락·익사 등 비의도적 사고로 인한 사망자만 포함

- 또한,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책임성이 점차 확대·강화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는 안전을 스스로 확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로서 성인보다 안전 사고에 노출되기 쉬우며 신체상 큰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사회가 정책적으로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생활환경 속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
- 특히 저출산 시대에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하는 상황임
  - \* 14세 이하 어린이 수 : ('16) 698만명 → ('20) 638만명 / 5년간 60만명(8.6%) 감소

□ 그러나, 어린이 안전에 관한 관리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관부처가 없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안전관리 대책 마련의 어려움이 있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을 목표로 어린이 안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기본이념)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추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법 제2조)

\*\* (어린이 정의)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법 제3조)

□ 법령의 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법 제4조)

- 5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법 제7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법 제8조)

□ 경기도는 전국 최다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2022년 7월 기준으로 만 13세 어린이는 1,602,208명으로 전국 어린이(5,503,816명)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10,136개소로 서울(5,049개소)의 약 2배 규모이며 전국 어린이집 (33,246개소)의 30%를 차지함.

□ 경기도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 2) 연구의 목적

□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다양한 정책적 추진과 예산 투입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린이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그 중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 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오랜 기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 왔음

□ 따라서 미국 등 주요국의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와 운영형태 등을 조사하여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기도 어린이 안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 연구시간 범위

- o 본 연구의 시점은 2023년 현재를 기준으로 설정함

#### ☐ 연구내용 범위

- o 어린이 안전 관련 법령 현황
- o 어린이 안전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정책
- o 어린이 안전 사고 및 정책 관련 언론보도 내용
- o 미국 내 어린이 안전 정책사례 조사 등

### 2) 연구의 방법

- ☐ 어린이 안전 보호 등 관련 법령 조사·연구
- ☐ 어린이 안전 관련 연구보고서 검토·분석
- ☐ 어린이 안전 관련 언론보도 내용 조사
- ☐ 어린이 안전 관련 현지 전문가 사례조사 및 전문가 면담
- ☐ 어린이 안전 관련 홈페이지 조사

## II. 본 론

### 1. 한국의 어린이 인구현황과 발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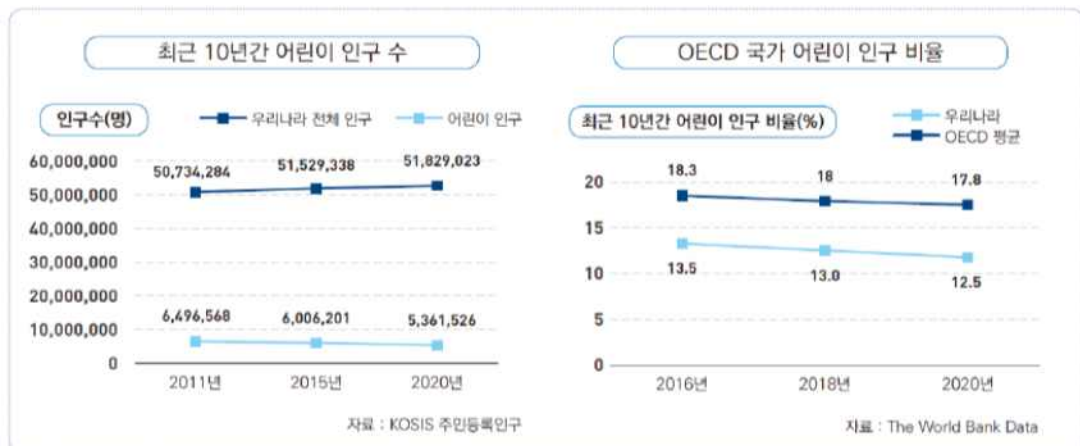
#### 1) 어린이 인구와 출산 현황

□ 최근 10년간('11 ~ '20년) 우리나라 어린이 인구(12세 이하)는 17.5% 감소하였고

\* ('11년) 6,496,568명 → ('20년) 5,361,526명(1,135,042명 감소)

□ '20년 현재 OECD 주요국 중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나라에서 저출산 현상으로 전체 인구 대비 어린이 인구(14세 이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어린이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12.5%로, OECD 평균(17.8%)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편임\*

\* 2020년 미국(18.4%), 터키(23.9%), 호주(19.3%), 칠레(19.2%)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TFR 2.1명 이하)은 3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초저출산 현상(TFR 1.3명 이하)은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

\* '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FR)은 0.9명/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OECD 평균 : 1.61명)



## 2) 어린이 발달 특성

### ① 영아기 (0세)

- 기본적인 반사운동과 감각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대근육(목 가누기, 앉기 등)과 소근육(손 뻗기, 잡기, 쥐기 등) 발달이 이루어짐.
- 뼈가 점차 단단해지면서 골격도 발달하고 내부기관이 보호됨.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실험과 탐색 시도
- \* ‘영아기’ 안전사고 :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서 활동 범위가 좁고 시간 대부분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으로 분석)

#### < 안전사고 특성 >

- ◆ (발생장소) 주 활동공간인 가정 내에서 대부분 발생(89.3%,)
- ◆ (위해품목) 침실가구(37.8%), 유아용 가구(8.6%) 등 순으로 매년 유사한 추이를 보임
- ◆ (위해유형) 추락(53.4%)이 가장 많음(주요 원인품목 : 침대, 소파, 유모차 등)
- ◆ (위해증상) ‘뇌진탕 및 타박상과 피부 및 피하 조직 손상 등의 순으로, 해당 사고가 매년 전체의 약 80%를 차지

<출처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안전사고(2017~2021) 동향 분석>

### ② 걸음마기(1~3세)

- 영아기보다 운동능력이 향상되어 뛰기, 계단 오르기 등을 할 수 있고 머리가 신장에서의 비중에서 점점 작아져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 신체 균형이 발달.
- 언어와 상징을 이용하여 사고하며, 단순한 사물을 분류할 수 있는 분류능력이 발달하고, 자아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함.

#### < 안전사고 특성 >

- ◆ (발생장소) 주 활동공간인 가정 내에서 대부분 발생(79.3%,)
- ◆ (위해품목) 바닥재(37.8%), 침실 가구(8.6%), 완구, 거실 가구 순
- ◆ (위해유형) ‘미끄러짐·넘어짐’(27.1%)으로 가장 많으며, 주요 원인품목은 ‘마루재’, ‘바닥재’, ‘킥보드’ 등
- ◆ (위해증상) 피부 및 피하 조직 손상이 매년 안전사고의 절반을 차지

<출처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안전사고(2017~2021) 동향 분석>

### ③ 유아기 (4세~6세)

- 신체에 대한 균형을 잡으면서 움직임이 더욱 안정되고 유연해지며, 소근육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면서 양손을 이용한 활동도 가능.
- 활동적인 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놀이터, 키즈카페, 유치원 등 외부활동이 증가.
- 구체적인 사물이나 행동에 대한 제시가 없어도 상상이나 추측을 통한 행동이 부분적으로 가능.

**< 안전사고 특성 >**

- ◆ (발생장소)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도로와 인도' 등의 순
  - ◆ (위해품목) 바닥재(000%), '놀이터 시설', '놀이 장비와 액세서리' 등의 순
  - ◆ (위해유형) '미끄러짐·넘어짐'(32.8%)이 가장 많으며, 주요 원인품목은 '키키펀드', '바닥재', '마루재', '자전거' 등
  - ◆ (위해증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뇌진탕 및 타박상,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등의 순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안전사고(2017~2021) 동향 분석>

④ 학령기 (7세~14세)

- 다른 발달 단계에 비해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며 뼈와 근육의 발달로 운동능력이 향상되어 정교한 신체 움직임이 가능.
- 집단놀이를 통하여 사회성이 발달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서도 상황을 인식.

**< 안전사고 특성 >**

- ◆ (발생장소)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도로 및 인도', '교육시설' 등의 순
  - ◆ (위해품목) 놀이터 시설'이 가장 많았고, '자전거', '바닥재' 등의 순
  - ◆ (위해유형)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8,080건(3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원인품목은 '자전거', '키키펀드' 등
  - ◆ (위해증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뇌진탕 및 타박상 등의 순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안전사고(2017~2021) 동향 분석>

⑤ 발달 단계별 비교<2017~2021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안전사고(2017~2021) 동향 분석>

- 발달 단계별 주요 위해발생장소 현황
- 아이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내장소인 '주택'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실외장소인 '도로 및 인도', '교육 시설',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의 비율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임.

**[표 31] 발달단계별 주요 위해발생장소**

구분	영아기 (0세)		걸음마기 (1~3세)		유아기 (4~6세)		학령기 (7~14세)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주택	8,823	(89.3)	39,427	(79.2)	16,203	(63.7)	10,748	(44.7)
도로 및 인도	125	(1.3)	1,205	(2.4)	1,556	(6.1)	2,913	(12.1)
교육시설	28	(0.3)	1,512	(3.0)	1,529	(6.0)	2,548	(10.6)
여가문화 및 놀이시설	40	(0.4)	1,727	(3.5)	1,996	(7.8)	1,832	(7.6)

단위: 건, (%)



- 발달 단계별 주요 위해 품목
  - ‘영아기’ 는 ‘침실가구’ (37.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걸음마기’ 와 ‘유아기’ 는 ‘바닥재’ 가 각각 16.5%, 12.5%, ‘학령기’ 는 ‘놀이터 시설’ (12.0%)로 가장 많음.
  - 주택 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영아기’ 와 ‘걸음마기’ 는 ‘가구’, ‘바닥재’ 에 의한 사고 비중이 높았고, 활동량이 증가하는 ‘유아기’ 와 ‘학령기’ 는 ‘놀이터 시설’, ‘자전거’ 등 실외품목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더욱 높았음.

[표 32] 발달단계별 주요 위해품목(중분류) 현황

순위	영아기	걸음마기	유아기	학령기
1	침실가구 (3,712건, 37.6%)	바닥재 (8,218건, 16.5%)	바닥재 (3,175건, 12.5%)	놀이터 시설 (2,872건, 12.0%)
2	유아용 가구 (847건, 8.6%)	침실가구 (4,733건, 9.5%)	놀이터 시설 (2,579건, 10.1%)	자전거 (2,472건, 10.3%)
3	거실가구 (721건, 7.3%)	완구 (3,505건, 7.0%)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1,941건, 7.6%)	바닥재 (1,427건, 5.9%)
4	바닥재 (625건, 6.3%)	거실가구 (3,411건, 6.9%)	완구 (1,809건, 7.1%)	필드 및 코트 운동장비 (1,313건, 5.5%)
5	주방가구 (320건, 3.2%)	문 (2,818건, 5.7%)	침실가구 (1,647건, 6.5%)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 (1,155건, 4.8%)
6	문 (315건, 3.2%)	주방가구 (2,336건, 4.7%)	문 (1,354건, 5.3%)	기타 스포츠 장비 및 용품 (1,088건, 4.5%)
7	주방가전 (280건, 2.8%)	유아용 가구 (1,959건, 3.9%)	거실가구 (1,001건, 3.9%)	문 (1,007건, 4.2%)
8	유가공품 (233건, 2.4%)	놀이터 시설 (1,788건, 3.6%)	여행, 문화 놀이시설 및 서비스 (671건, 2.6%)	문구용품 및 학습용품 (773건, 3.2%)
9	완구 (221건, 2.2%)	학생용 및 서재용 가구 (1,611건, 3.2%)	학생용 및 서재용 가구 (670건, 2.6%)	교육, 연구기관 시설 및 서비스 (704건, 2.9%)
10	유란류 (171건, 1.7%)	주방 가전 (1,224건, 2.5%)	기타 승용물 (662건, 2.6%)	침실가구 (643건, 2.7%)

- 발달 단계별 주요 위해유형 현황
  -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추락’ 사고는 모든 발달 단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나,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점차 비중이 높아졌으나 ‘추락’ 사고는 점차 낮아짐.
  - ‘부딪힘’ 사고의 비율은 걸음을 시작하나 아직 서툰 ‘걸음마기’ 에 가장 높았으나(19.9%), ‘유아기’ 와 ‘학령기’ 에는 그 비중이 각각 18.4%, 13.0%로 감소함.

## 2.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 1) 어린이 사망통계

-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한해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사망한 어린이(14세 이하)는 총 1,204명이며,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는 250명\*\*(20.8%)

\* 통계청 사망통계는 질병과 사고로 구분, 이 중 사고는 비의도적 사고와 의도적 사고로 분류

\*\* 비의도적 사고(운수·추락·익사 등) 150명, 의도적 사고(자살·타살)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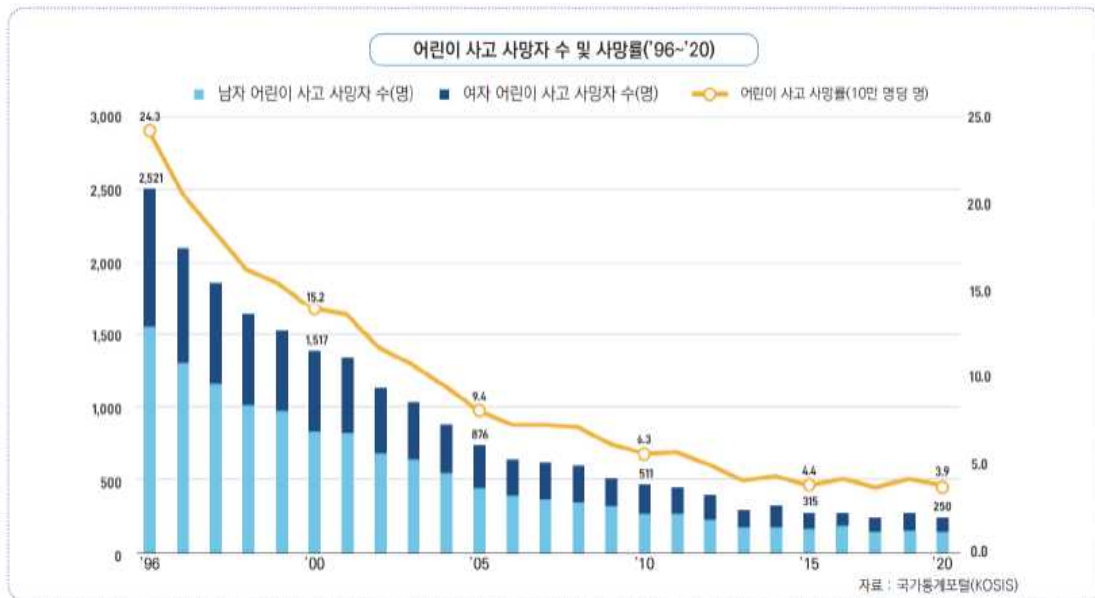
-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및 정책적 노력 등으로 '20년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자 수는 '10년(511명)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

\* (어린이 사고 사망률) ('10) 6.3명 → ('20) 3.9명, 약 40% 감소

\*\* (성별 사망률) 남자 ('10) 7.6명 → ('20) 4.7명 > 여자 ('10) 4.9명 → ('20) 3.1명

- 그러나 최근 5년('16년~'20년)간 어린이 사고 사망률\*(어린이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된 양상

\* ('16) 3.9명 → ('17) 4.2명 → ('18) 3.8명 → ('19) 4.2명 → ('20) 3.9명



### 2) 비의도적\* 어린이 사고 사망률('18년 ~ '20년)

\* 어린이 안전사고의 개념적 범위는 비의도적 사고만 포함, 의도적 사고(자살·타살)는 제외

- '18년 ~ '20년 3개년 간 비의도적 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총 480명으로, 비의도적 어린이 사고 사망률은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약 2.4명 수준

- 사망원인은 운수(29.0%)·추락(18.1%)·질식(17.9%)·익사(12.7%)·화재(5.2%) 순이며, 연령별 사망률은 0세\*가 11.8명으로 가장 높고, 10~14세\*\*는 0세의 약 1/9 수준인 1.3명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망률은 낮아짐

\* 0세 사망원인 : (1순위) 질식사고, (2순위) 추락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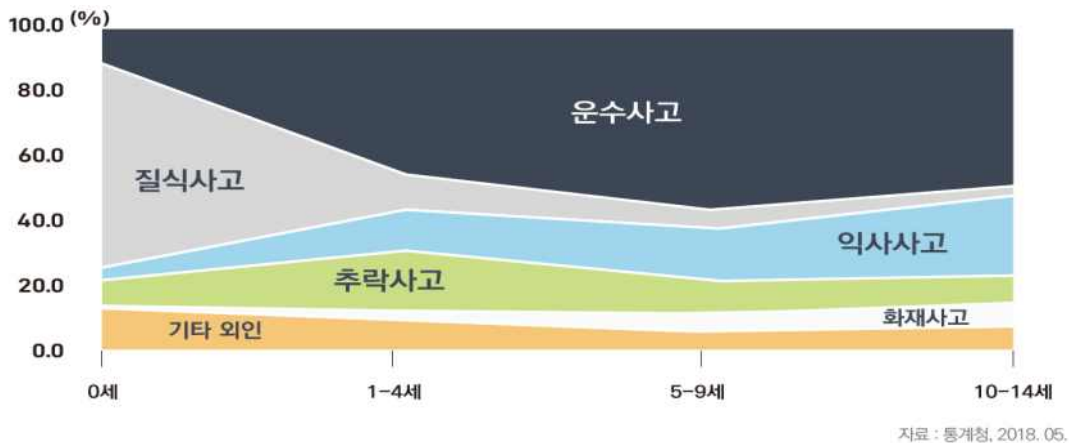
\*\* 10~14세 사망원인 : (1순위) 운수사고, (2순위) 추락사고 및 익사 사고

## < 참 고 >

### ◆ 어린이 사고 사망원인별 특성 분석('14년~'16년)

- (운수사고) 보행자 사고가 어린이 운수 사망사고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어린이 운수사고 사망유형은 보행자(43.7%), 차량 탑승자(20.4%), 자전거 탑승자(5.9%), 모터사이클 탑승자(3.7%) 순
  - 연령별 사망률은 1~4세가 1.5명으로 가장 높고, 요일별은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50.4%), 시간대는 16~20시(38.1%)에 가장 많이 발생
- (질식사고) 어린이 질식사고 사망자 중 침대에서 질식이 34.2%
  - 어린이 질식사고 사망유형 : 침대(34.2%), 음식물 흡입(16.7%), 위 내용물 흡입(10.5%) 순
  - 1) 침대에서의 질식 : 베개, 침대보 또는 엄마의 몸 등에 의해 질식
  - 2) 음식물 흡입: 뼈나 씨를 포함한 음식물에 의한 기도 압박이나 폐색 등
  - 3) 위 내용물의 흡입 : 구토물 등에 의한 기도 압박이나 폐색 등
- (익사사고) 어린이 익사사고 사망 중 자연수(냇가, 강 등) 익사가 30.4%로 가장 높음.
  - 어린이 익사사고 사망유형 : 자연수(냇가나 강 등, 30.4%), 목욕통(7.6%), 수영장(5.4%) 순으로, 특히 5세 미만 익사사고는 목욕통이 가장 많음
- (추락사고) 어린이 추락사고 사망 중 아파트·빌딩 등 건물에서의 추락이 56.4%
  - 어린이 추락사고 사망유형은 건물추락(56.4%), 침대 낙상(7.7%) 순이고 0세의 추락사고는 침대에서의 낙상(45.5%)이 가장 많음

### <어린이 연령별 비의도적 사고 사망자 원인별 구성비('14년~'16년)>



### 3) 어린이 안전사고 분야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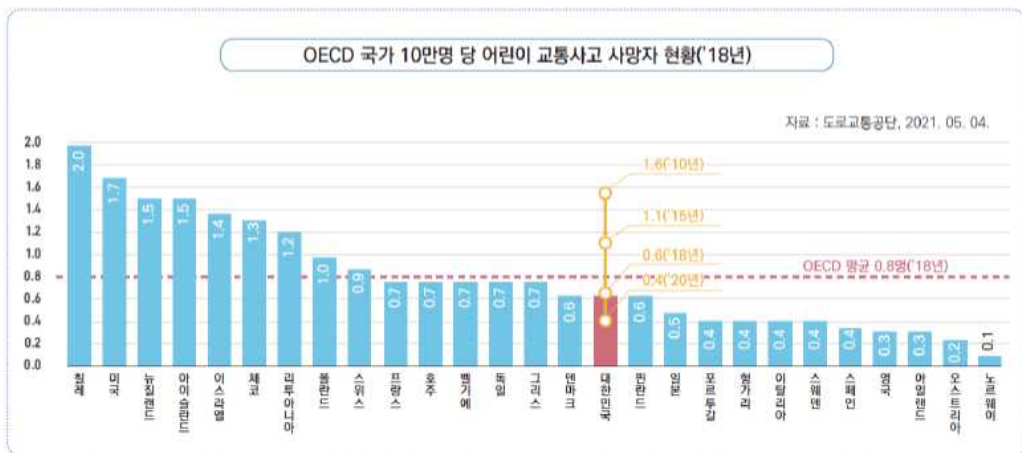
#### ①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현황('16년 ~ '20년)

- 최근 5년간('16년 ~ '20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는 계속 증가하다 '20년 감소하였으나,

#### 참 고

##### ◆ OECD 국가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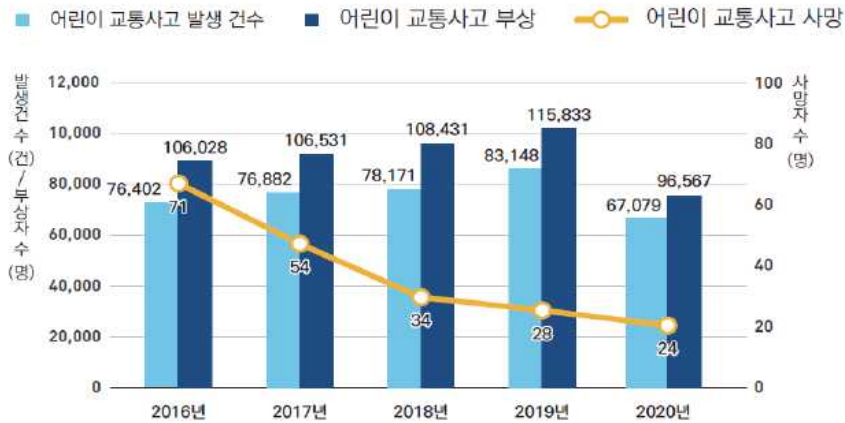
- '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어린이 인구 10만명 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0.8명에 비해 낮음, '20년은 0.4명으로 지속 감소



- 사회 전반에 걸친 ‘차량우선’ 교통문화로 인해 보행자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15년 기준 어린이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는 0.71명으로 OECD 평균 (0.32명)보다 2배 이상 높음
- 어린이 보호구역을 '95년 최초 도입하였으며, '03년 「어린이 안전원년」 선포를 계기로 보호구역 개선사업 재정지원을 시작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건수는 '03년 이후 '20년까지 2.5배 증가\*, 보호구역 100개소당 교통사고 건수는 67%, 사망자는 93% 감소\*\*
-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03) 6,712개소 → ('20) 16,896개소(10,184개소↑, 152%↑)
- \*\* 교통사고 : ('03) 8.76건 → ('20) 2.85건(△5.91건, △67%) / 사망자 : ('03) 0.27명→ ('20) 0.018명(△0.252명, △93%)
- 최근 10년간('09년 ~ '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횡단중, 하교 시간, 미취학·저학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높은 비중 차지

최근 5년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 :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사고유형 : 총 5,415건 중 횡단 중 3,049건(56.3%), 차도 통행 중 273건(5.0%), 보도 통행 중 254건(4.7%) 등
- 시간대별 : 총 5,415건 중 14~16시 1,429건(26.4%), 16~18시 1,339건(24.7%) 등
- 연령대별 : 총 5,719명 중 7세 1,087명(19.0%), 8세 989명(17.3%), 9세 765명(13.4%), 6세 622명(10.9%) 등
- 사고원인 : 총 5,415건 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822건(33.6%),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1,710건(31.6%) 등

-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사고는 5년간('16년 ~ '20년) 평균 70건, 약 10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17년 ~ '19년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건수 및 사상자가 예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

(자료 : 2021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건)	38	103	84	88	37
사망자수(명)	1	0	1	0	0
부상자수(명)	59	155	124	131	56

※ ('13) 32건 발생 68명 사상, ('14) 31건 발생 57명 사상, ('15) 38건 발생 60명 사상

## ②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현황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및 부속품(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 최근 10년간('11년 ~ '20년)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는 연평균 23,629건으로, 전체 제품 안전사고 연평균 건수인 67,173건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



- '20년 기준 총인구 대비 어린이 인구비율 12.5%에 비해 어린이제품 안전 사고율은 26.4%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인구 대비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율은 2배 이상 많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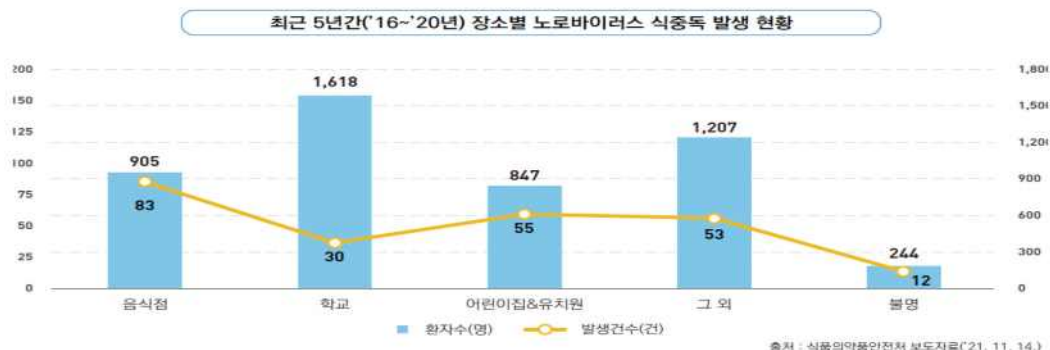


- 최근 3년간('18년 ~ '20년) 장소별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는 가정에서의 사고 비율이 69%로 가장 높으며, 사회적 쟁점이 된 유해물질 등 화학적 사고 보다 대부분 미끄러짐·추락·부딪힘 등 물리적 사고 위주로 발생

\* 발생장소 : 가정 내(69%), 교육시설(5%), 여가문화시설(5%), 스포츠레저시설(2%), 기타(19%)  
 \* 사고원인 : 미끄러짐·넘어짐(28%), 추락(20%), 부딪힘(17%), 놀람·까임(7%), 기타(28%)  
 \* 연령대별 : 1~3세 걸음마기(46%), 4~6세 유아기(23%), 7~14세 학령기(22%), 영아기(9%)

### ③ 어린이식품 안전사고 현황

- 식생활 개선과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기준 위반율은 지속해서 감소
- \* ('11) 적합 403,866개소 / 위반 356개소(0.09%) → ('16) 적합 375,362개소 / 위반 146개소 (0.03%) → ('20) 적합 223,536개소 / 위반 23개소(0.01%)
- 그러나, 밀집된 공간에서 단체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
- \* 최근 5년간('16~'20) 전 국민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등),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노로바이러스)이 매년 반복하여 발생



## 참 고

###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현황

- '20년 12월 기준,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7,513곳)
- 학교주변 외 어린이 이용이 많은 학원가 등 주변에 보호구역 시범 지정(147곳)

###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주요 통계 현황〉

(20.12.31.기준, 단위 : 개, 개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백서)

학교 수	식품안전보호 구역 수	식품안전보호 구역 내 학교 수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수	전담 관리원 수
12,017	7,513	10,020	35,695	1,975	2,889

### ④ 어린이 유해환경물질 노출현황

- 어린이용품 특성상 화려한 색상 및 촉감적 즐거움을 주는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 사용
- 최근 KC인증을 받은 유아용 용품에서 환경호르몬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용품의 사후관리가 미흡
- \* 아이 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 검출
- 현재 어린이 건강보호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는 있으나, 환경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환경성질환의 하나인 성조숙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어린이·청소년이 '16년 86,352명이었으나, '20년 136,334명으로 연평균 12% 증가

최근 5년간 연도별 성조숙증 환자수 추이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⑤ 어린이이용시설\* 안전사고 현황

- \* 어린이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과 미술관 등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최근 5년간('16년 ~ '20년)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모두 매년 증가('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폭 감소)
  - \* ('16) 7,619건 → ('17) 7,707건 → ('18) 7,484건 → ('19) 8,768건 → ('20) 6,202건
  - \*\* ('16) 38,548건 → ('17) 41,661건 → ('18) 45,425건 → ('19) 53,773건 → ('20) 12,128건
  - '20년 기준, 시간별·장소별 안전사고 발생빈도를 보면 유치원은 수업시간(58.4%)과 교실(52.4%), 초등학교는 체육수업(30.6%)과 부속시설(34.6%)에서 많이 발생하고, 사고형태로는 공통으로 물체와의 충돌·부딪힘·받힘(유치원 41.0%, 학교 36.4%)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 <출처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최근 5년간('16년 ~ '20년) 어린이집 보육아동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안전 사고\*\*는 증가 추세('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
  - \* ('16) 1,451천명 → ('17) 1,450천명 → ('18) 1,416천명 → ('19) 1,365천명 → ('20) 1,244천명
  - \*\* ('16) 19,593건 → ('17) 20,451건 → ('18) 20,649건 → ('19) 22,802건 → ('20) 16,106건
  - '19년 기준,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빈도를 보면 사고 당시 활동유형은 실내 자유 선택활동(41.0%), 장소는 보육실(64.3%), 사고유형은 넘어짐(30.3%)이 가장 많음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또한, 어린이 생활 범위가 유치원·학교·보육 시설을 벗어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놀이기구시설, 체육시설, 공연장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위해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각지대는 증가하는 추세
  - \* 놀이기구 손가락 절단사고('14년), 짚라인 어린이 사망사고('15년), 키즈카페 안전사고('19년) 등



## 2. 한국의 어린이 안전 정책

### 1) 어린이 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 및 성과

- 정부는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였고,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구분	주요내용		
아동안전종합대책 (2003) [12대 분야 76개 과제]	비전 및 목표	매년 아동안전사고 사망자 수 10%씩 감소	
	안전대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안전</li> <li>• 익사사고 대책</li> <li>• 추락사고 대책</li> <li>• 미아찾기</li> <li>• 안전교육</li> <li>• 안전문화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악물놀이용품등 사고대책</li> <li>• 어린이 통학차량제도 개선</li> <li>• 아동학대·폭력방지</li> <li>• 불량식품방지</li> <li>• 자치단체 관련</li> <li>• 안전대책 추진체계</li> </ul>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2013)	비전 및 목표	통학차량사고 재발방지를 통해 안전한 사회 만들기	
	안전대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추진과제 : 통학차량 전수조사, 캠페인 및 집중단속, 통학차량 운전자·운영자 집중 안전교육,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통학차량 '노란스티커' 부착</li> <li>• 제도개선 과제 :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교육목적 유상운송 허가조건 개선, 안전기준 강화, 법위반 처벌강화, 시설 행정처분 강화, 정보공개 신설, 안전운전교육 강화</li> <li>• 추진체계 정립 : 세부실천계획, 지역협의체, 추진실적 점검·평가</li> </ul>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2013) [4대 분야, 10개 주요과제, 26개 세부과제]	비전 및 목표	어린이가 안심하고 자랄 수 있는 행복한 나라	
	안전대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성장 공간 조성</li> <li>• 안심하고 누리는 주위 생활환경 구축</li> <li>•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li> <li>•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li> </ul>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2016) [4대 분야, 14개 과제]	비전 및 목표	어린이 10만명 당 안전사고 사망자 1명대 진입	
	안전대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집중 감축</li> <li>•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li> <li>• 내실 있는 어린이 안전교육 강화</li> <li>• 어린이 안전평가·환류체계 구축</li> </ul>	
어린이 안전대책 (2018) [5대 분야, 14개 과제, 46개 세부과제]	비전 및 목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안전대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교통안전</li> <li>• 어린이 식품안전</li> <li>• 어린이 안전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제품안전</li> <li>• 어린이 생활공간</li> </ul>

- 추진 분야는 시기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제품안전, 식품안전, 교통안전, 안전교육, 생활공간의 5개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 제품안전 분야는 위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물질 관리, 식품안전 분야는 불량식품 관리와 학교급식 안전관리,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학차량의 안전, 안전교육 분야는 안전 체험교육 활성화와 안전교육 강화, 생활공간 분야는 보육교육시설과 놀이 시설 등 안전관리

- 아동학대와 폭력(성폭력, 학교폭력)이 1·2차 종합대책에는 주요 분야에 포함되었으나 3·4차 종합대책에서는 제외되었고, 1차와 3차 종합대책에는 어린이안전 대책 추진체계와 평가가 주요 분야로 포함되었음

□ 그동안 추진된 종합대책은 목표와 비전에서 차이를 보임.

- 1차 종합대책에서는 그 해를 어린이안전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목표로 어린이 안전 사고 사망자 수의 대규모 감축으로 설정하였고, 2차 종합대책은 어린이 안전 사고의 유형을 연령별·활동공간별로 분석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유형별로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3차 종합대책은 선진국 수준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4차 종합대책은 체계적으로 추진 분야를 정리함

####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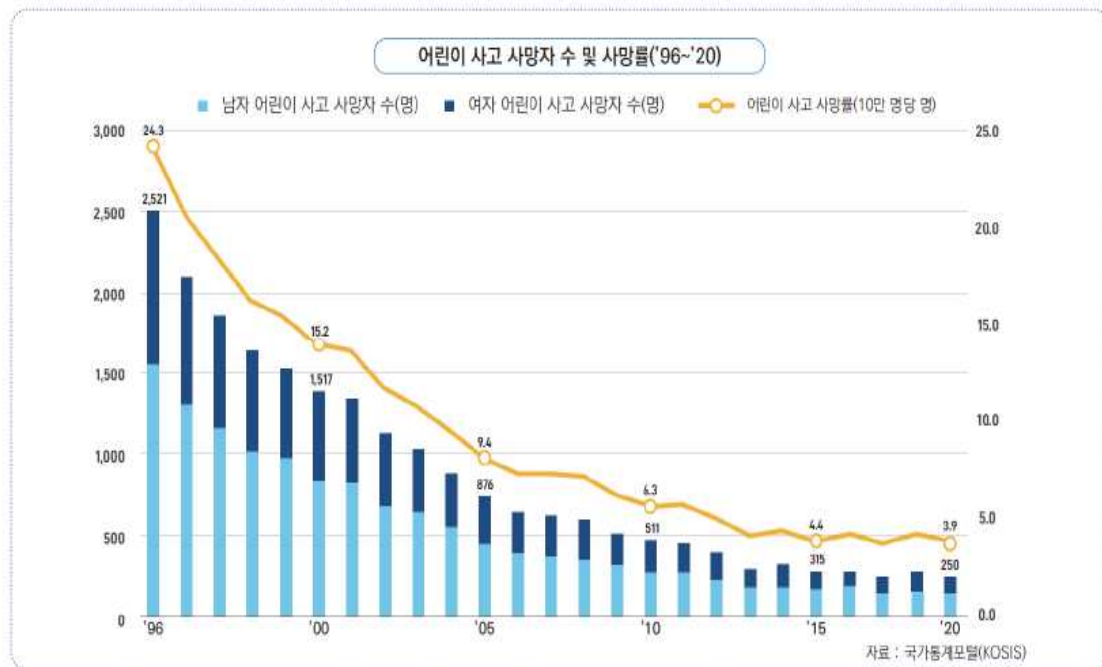
구분	1차 종합대책	2차 종합대책	3차 종합대책	4차 종합대책
추진 시기	참여정부 (2003~2008년)	박근혜정부 (2013.6월~)	박근혜정부 (2016.4월~)	문재인정부 (2018.5월~)
추진 체계	12개 분야, 76개 과제	4개 분야, 10개 과제, 26개 세부과제	4대 분야, 14대 과제	5대 분야, 14개 과제, 46개 세부과제
추진 과제	어린이 안전사고, 아동학대·폭력,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추진체계	성장공간, 생활환경, 범죄·폭력, 어린이제품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교육, 안전평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생활공간, 안전교육
의미	2003년 어린이안전 원년 선포	연령별·활동공간별 안전관리 대책 마련	어린이 사망자 수 선진국 수준 감축 목표	어린이 소비제품 분야 강화

□ 그동안의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일정 부분 어린이안전정책에서 성과를 거두어 온 것으로 분석됨

-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소) 제1차 종합대책을 수립한 2003년(‘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한 해)의 어린이 안전 사고의 사망자 수는 1,126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270명으로 감소(76.0%↓)하였음.

- 인구 10만 명당 어린이 사고 사망률은 2010년 6.3명 대비 2020년 3.9명으로 감소함.(약 40% 수준)

\* 2015년 OECD(32개국)의 어린이 사고 사망률 평균은 3.7명(한국 3.9명/9위), 자타살을 제외한 비의도적 사고 사망률의 OECD 국가 평균은 2015년 3.1명(한국은 2.8명/12위) - 통계청, 2018



○ (특별법 제정) 어린이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 3개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가 갖추.

- 2007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08년 어린이 식품에 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2014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이 각각 제정되어 안전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주요 제도 개선) 어린이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주요 제도 개선을 추진

- (영유아보육법 개정)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및 법위반 공표 시행
-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 승차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 어린이용품 및 완구 안전관리기준 강화
- (납 기준 신설) 어린이보호를 위한 포장 의무제도 시행, 어린이 활동공간에서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 강화
- (주택법 개정) 주택난간 설치기준 강화,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 강화,

## 2) 정책 추진의 한계 및 향후 계획

- 수차례에 걸쳐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에도 상황 대응을 위한 일회성 대책 성격 등으로 계획의 지속성과 추진 관리가 다소 미흡

## □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지속 발생 (연간 약 11만명)

○ 다년간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 등으로 보행 중 사망사고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6년 76,402건과 비교하여 '20년 67,079건으로 12.2% 감소

\*\* 국내 어린이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률은 0.71명으로 OECD 평균 0.32명보다 2배 높음

○ 어린이의 행동 특성상 도로를 횡단 할 때 종합적으로 주변 교통상황을 판단하고 건너기보다는 횡단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달리는 경향이 있어 횡단 중\*, 하교 시간\*\*에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

\* 최근 10년간('09~'18)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총 5,415건 - ▲횡단 중 3,049건(56.3%), ▲차도 통행 중 273건(5.0%), ▲보도 통행 중 254건(4.7%) 등

\*\* 총 5,415건 중 ▲14~16시 1,429건(26.4%), ▲16~18시 1,339건(24.7%) 등

○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등) 시행('20.3.)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수준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의 통학로에서의 안전 강화 대책이 마련도 필요한 상황

- 아파트 거주 어린이 설문결과, 단지내 도로(86.1%)가 어린이 보호구역(13.9%)보다 6배 더 위험하다고 응답(997명 대상 설문, '19년 현대해상 자료)

## □ 어린이제품 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발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15.6.) 후 안전기준 마련과 사후관리로 리콜 등 부적합제품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물리적 요인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연평균 2만건 이상 발생\*\*

\* 부적합제품 비율 : ('19) 10.9% → ('20) 6.9% → ('21) 5.7%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 ('16) 22,545건 → ('18) 24,097건 → ('20) 18,494건

○ 새로운 온라인상 판매기업이 등장하며 유통산업 재편 등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불법 어린이제품의 구매대행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오픈마켓으로 구매 대행되는 완구 75개 중 KC마크 미표시 제품 38개(50.7%) ('20년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의 안전인식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를 위한 인증·리콜, 불법제품 및 제품사고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부족

\* KC마크를 본 적 있는 소비자 비율 : ('14) 84.8% → ('17) 91.5% → ('20) 92.0%

## □ 어린이 식중독 사고 지속 반복, 수입식품 증가 및 활동공간 변화

○ 급식시설 점검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린이 급식소에서 매년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로 인해 집단급식 안전 관리에 대한 요구 증대

- \* 어린이집 : ('16) 8건 → ('17) 7건 → ('18) 13건 → ('19) 10건 → ('20) 8건  
유치원 : ('16) 10건 → ('17) 5건 → ('18) 5건 → ('19) 8건 → ('20) 4건  
초등학교 : ('16) 5건 → ('17) 3건 → ('18) 15건 → ('19) 15건 → ('20) 0건
- o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과자 등 수입식품에서 세균수, 산가 등 기준규격 부적합이 지속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 필요
- \* 일부 인도산 과자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21.10월) 어린이 식품 구입 경로가 과거 학교 주변 문구점·매점에서 편의점으로 변화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환경변화에 따른 대책 전환 필요

#### □ 유해환경물질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증가

- o 어린이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통해 물건을 탐색하는 습성이 있어 어린이용품을 통한 환경유해인자 노출 가능성 증가
- o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가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벽지, 바닥재, 접착제 등에 포함된 환경호르몬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
- o 어린이는 어른보다 대사량이 훨씬 높아,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경우 환경성 질환\* 유병률이 더욱 높음
- 환경성 질환자 유병률은 전체 연령에서 16.8%를 차지하는 반면, 14세 이하 어린이는 32.7%로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 등 환경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애로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성조숙증, 환경성 호흡기 질환 등 유니세프 발표 전세계 납오염 노출 보고('20)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혈중 납 농도는 1.46 $\mu$ g/dL로 크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미국(1.10 $\mu$ g/dL)·캐나다(1.16 $\mu$ g/dL) 등 선진국의 납 노출수준에 비해서는 높은 상황

#### □ 어린이이용시설 생활환경 속 다양한 위험요인

- o '16년 4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내린 5세 어린이가 제동장치가 풀린 SUV 차량에 치인 후 응급조치를 못 받고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일명: 해인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관심 증가
- \* 미국은 유아교육기관 인가 규정에 응급처치와 CPR(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교사 1명 이상을 유아교육기관에 배치하도록 의무화

####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어린이 안전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어린이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o 국가 경제 발전과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

- 주변의 환경을 분석하여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성 대두
- 국내외 어린이 출생 및 인구 전망, 어린이의 발달 특성, 어린이 안전사고 및 사망자 발생현황 등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비전, 전략, 추진과제 수립 필요
  - o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 예방을 목표로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 (기본이념)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추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법 제2조)
    - \*\* (어린이 정의)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법 제3조)

#### □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 수립·시행

-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법 제4조)
- o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법 제7조)
- o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법 제8조)

#### 그간의 추진경과

- o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2~'26) 수립 연구('21.5~11월)
- o 어린이안전 인식조사('21.7~8월)
  - \* 어린이, 보호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
- o 관계부처 협의 및 민간전문가현장종사자 등 의견수렴
- o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안) 마련('22.3월)
- o 관계부처 최종 협의('22.4~5월)
- o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심의('22.6월)
- o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22.8월)



## 2)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 주요 내용<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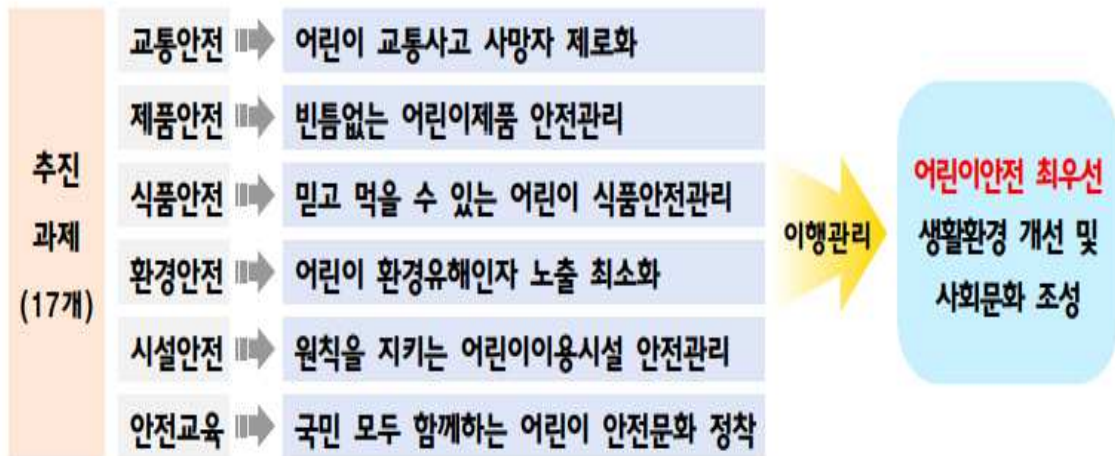
### □ 비전 및 목표



### □ 분야별 정책과제

분야별 정책과제	어린이교통 안전관리	1. 어린이 통학로 안전인프라 확충 2. 어린이 교통안전 위반행위 저감 3.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조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1.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정비 2.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감시·관리 3. 안전한 어린이제품 인프라 조성
	어린이식품 안전관리	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2. 어린이 식중독 저감화 지속 추진, 스마트한 급식관리 3. 어린이 활동공간 주변 식품안전관리
	어린이환경 안전관리	1.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2.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기준 적용 및 실내공기질 관리 3.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 관리체계 마련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관리	1. 학교안전사고 예방·관리체계 확립 2. 유원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3.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인식개선
	어린이 안전교육	1.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 활성화 2.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강화

□ 중점 추진정책



### 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확산,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및 적정성 여부 검증 체계 도입
- (안전한 통학로 확보)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보행로 설치 곤란 장소에 일방통행 지정, 교내 안전한 보행로 마련

### ②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 (안전기준 정보제공) 안전사고 분석 및 위해요소 평가 등을 통한 화학적·물리적 안전기준 정비, 어린이·성인 공용제품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제품 관리 인프라 조성) 수입·통관단계 어린이제품 점검(모니터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상품분류기준(GPC\*) 적용,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

\* GPC(Global Product Classification) : 제품식별을 위한 글로벌 표준(아마존, 이베이 등에서 사용)

### ③ 믿고 먹을 수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 (식생활 안전관리) 알레르기 유발식품 안전정보 제공, 고카페인 음료 과잉섭취 예방활동 실시, 수입식품 기준 적합성 관리
- (스마트한 급식관리) 식재료 보관·조리·배식 등 급식관리 전반 업무 지능정보화,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 급식소 확대

\* 집단급식소 정보 및 식재료 납품 정보 연계로 동일 식재료 납품시설에 식중독 발생주의 경보 발송



#### ④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평가,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 물질·제품 사전승인제도 단계적 도입
- (활동공간 안전관리) 어린이 활동공간 마감재료 등에 함유된 중금속(납)·프탈레이트류 가소제(7종) 검출기준 개정\*에 따른 실효적 적용, 실내공기질 진단 컨설팅 확대

\* 납 600 → 90ppm,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0.1% 이하(신설) ※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21.7.6.), '26년부터 전면 적용

#### ⑤ 원칙을 지키는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관리

- (학교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학교계획 수립·평가 프로그램과 학교안전 각종 시스템을 통합한 학교안전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교육 제도 정착) 학교·학원·보육시설·복지시설·체육시설·유원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처치교육 제도\* 정착

\*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매년 4시간 안전교육 실시(소아심폐소생술 실습교육 2시간 포함)

#### ⑥ 국민 모두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

- (안전체험관 활성화) VR·AR·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 실감 나는 체험교육 실시, 부모참여 등 가족단위 프로그램 활성화
- (맞춤형 안전교육)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활용한 소규모 안전체험공간 운영,

### 3. 주요 선진국의 어린이 안전 정책

#### 1) 미 국

##### ☐ 주관부서

- 안전분야는 국가 보건복지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어린이안전보호 사업은 연방정부의 보건인적서비스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및 민간조직인 National Safe Kids에서 추진하고 있음.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서 장난감 · 가구 · 놀이용품 등의 소비제품을 관장하고 고속도로교통안전국 (NHTSA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는 자동차 안전 관련을 식품의약품청(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는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 환경보호청(EPA :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은 환경에 관련된 건강문제를, 농무부에서는 담배제품 등 농산물을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는 통신기기를 관장하고 있음.
- 각 주는 지역의 상황과 환경 여건에 따라 독자적인 제품안전 관련사항을 입법화할 수 있음. 다만, 전국적인 통일성을 이유로 CPSC가 작성한 모델법을 준수하여 입법화하고 있음.
- 안전규격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공공단체인 국가표준협회(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가 있으며 전문분야별로는 미국재료시험학회 (ASTM)/ 세계 최대규모의 민간 임의표준제정 단체), 비영리법인인 미국보험업자협회(UL/전기·전자제품에대한 임의규격제정 및 인증 기관)등 600여 개의 각종 규격제정단체가 있으며 정부기관인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내 기술 표준국이 있음.

##### ☐ 어린이 안전 제도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제품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일반법인 소비자제품 안전법(CPSA)과 유해물방지 포장법(PPPA), 냉장고 안전법(RSA), 가연성직물법 (FFA), 연방위험물법(FHSA), 유해 미술 재료 라벨링법(LHAMA) 등을 관장하고 있음.
- 위원회는 가정과 학교, 여가 활동에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자동차, 담배, 항공기, 선박, 살충제, 무기 등을 제외한 품목의 안전사항을 관장하고 있음.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는 결함제품에 대한 시정(리콜)과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 등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예방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안전보호법에서는 어린이 장난감 등의 완구의 질식위험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결함정보에 대한 보고의무제도 등 리콜제도를 엄격하게 적용

## <CPSC 홈페이지>

United State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Recalls Business Education News Releases Regulatory Root Calendar Events Multimedia

Safety Education Business and Manufacturing Laws, Regulations, and Proceedings Research and Reports About Us

Commission Meeting regarding th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on Infant Support Carrying 10:00 a.m. - 12:00 p.m.

**Home Safe Home for the Holidays**

1 of 3 Make it a 'Home Safe Home' for the Holidays

### What We Do

- Recalls
- Safety Education
- Business & Manufacturing
- News Releases
- Research & Reports
- Regulatory Resources
- About CPSC
- Public Calendar
- Consumer Ombudsman

### Recalls

Never Miss a Recall

**Choose Your Recall Emails**

**IKEA Expands Recall of Mirrors Due to Laceration Haz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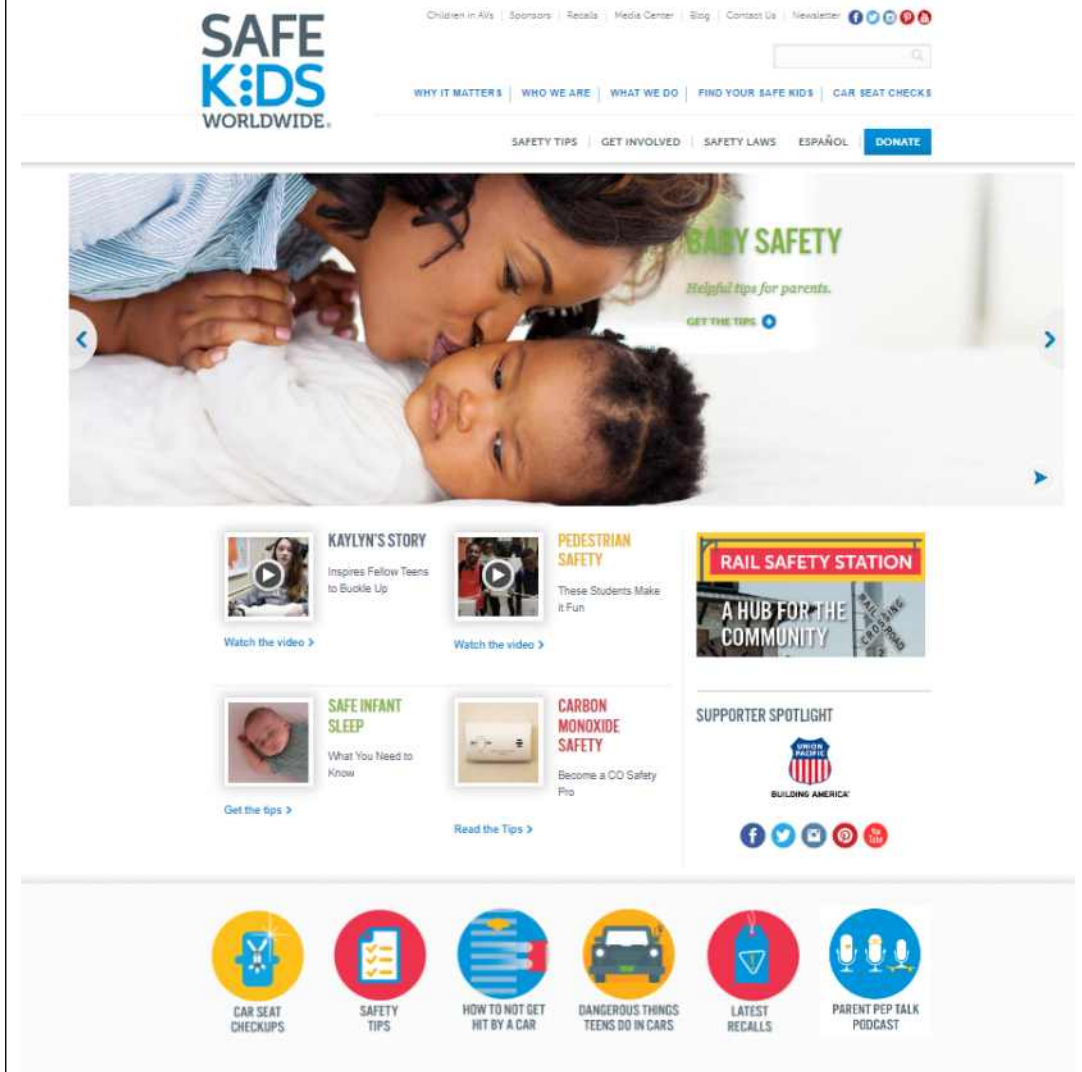
**Twin-Star International Recalls Infrared Quartz Electric Fireplaces Due to Fire Hazard; Sold Exclusively at Lowe's**

**Children's Nightgowns Recalled Due to Burn Hazard and Violation of Federal Flammability Standards; Sold by iMOONZZZ Exclusively on Amazon.com**

- FHSA(연방유해물질법)에는 특정 유해 가정용 제품에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어린이가 사용하도록 고안된 위험 물질, 장난감 또는 기타 물품을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함. 이 법에 따라 규제되는 제품의 예로는 전동 장난감, 유아용 침대, 딸랑이, 고무 젓꼭지, 자전거, 어린이용 이층 침대 등이 있음.
- FFA에는 인화성이 높은 의류와 실내 가구 제조를 규제합니다. FFA에 따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표준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했습니다. 확립된 표준의 예로는 의류 직물, 옷에 사용되는 비닐 플라스틱 필름, 카펫과 러그, 아동용 잠옷, 매트리스와 매트리스 패드 등이 있음.
- 기타 포장법에서는 독극물 중독의 방지를 위해 제품의 포장 및 라벨, 냉장고 안전법에서는 가정용 냉장고의 문을 안쪽으로부터 열 수 있는 장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o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주 정부 차원에서의 지역적인 노력을 함께 하고 있음.
- 특히 어린이를 안전을 위한 상해 예방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전국적인 어린이 안전 예방 단체인 National Safe Kids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익사사고예방, 화재와 화상 안전, 추락예방, 중독과 쇼킹예방 등 주요한 5개 영역의 아동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역과 함께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어린이 안전보호법(The Child Safety Protection Act, 1994년 제정)과 같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입법화 활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Safe Kids Worldwide ®는 1988년 워싱턴 DC에 있는 어린이 국립 병원의 소아 외상 외과 의사인 Martin R. Eichelberger, MD와 홍보 전문가인 Herta Feely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Eichelberger 박사는 Feely 및 Johnson & Johnson과 협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아동 부상을 예방하는 데 전념하는 미국 유일의 비영리 단체인 National SAFE KIDS 캠페인을 만들었음.
- ◆ 2005년 전국 SAFE KIDS 캠페인은 공식적으로 Safe Kids Worldwide가 되었으며 오늘날 Safe Kids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교통 부상, 익사, 낙상, 화상, 중독 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중이며, 창립 이래 19세 이하 어린이가 의도하지 않은 부상 발생률이 60% 감소하였다고 안내 중.
- ◆ Safe Kids Worldwide ®에서는 어린이의 안전과 연관된 법률의 제정을 건의하거나 제출된 법안(정책)의 의회에서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편지 또는 성명 형식으로 지지하는 등 어린이 안전관련법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음.
  - ▶ 유아용 침대 안전에 관한 법과 승용물 헬멧안전에 관한 법, 독극물 중독사고 조치에 대해 지지하였고, 어린이 승객의 보호에 관한 법(2000년 입법)과 놀이터 안전에 관한 법, 전국 놀이공원의 안전에 관한 법, 어린이 비비탄총에 의한 사고예방

- ▶ 승용차 및 라이터에 안전장치를 표시, 영아의 목욕시트와 매단줄, 승용차의 어린이 안전장치, 안전등급 프로그램, 인명구조기구 등의 규제에 관한 언급 등



- 아동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장난감, 놀이터, 아동용가구, 헬멧, 아동 보호 제품과 물에서 이용하는 장비 등의 안전에 대한 규격화를 실시하여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어린이의 사고예방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승용물 안전사고

- 두뇌의 손상을 막기 위해 아동안전보호법(The Child Safety Protection Act)에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차량의 어린이 안전시트 착용을 의무화한 법률을 제정 하였음.
- 미국의 일부 주(17개 주)에서는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 헬멧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5년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자전거 관련 사망

률을 60%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전동스쿠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동스쿠터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제품안전 위원회에서는 연령의 제한과 헬멧착용,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의 착용을 권장

현대식 자전거 헬멧은 1975년에 도입되었으며 주와 도시는 1980년대 후반에 자전거 헬멧 법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1987)와 뉴욕(1989)은 5세 이하의 자전거 승객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러한 법안을 시행한 최초의 주였습니다. 뉴저지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동안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최초의 주로 2022년 1월 현재 2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20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및 카운티에서 자전거 헬멧법이 시행되었음.

State	헬멧착용 의무화	State	헬멧착용 의무화
Alabama	15세 이하	Missouri	no law
Alaska	no law	Montana	no law
Arizona	no law	Nebraska	no law
Arkansas	no law	Nevada	no law
California	17세 이하	New Hampshire	15세 이하
Colorado	no law	New Jersey	16세 이하
Connecticut	15세 이하	New Mexico	17세 이하
Delaware	17세 이하	New York	13세 이하
District of Columbia	15세 이하	North Carolina	15세 이하
Florida	15세 이하	North Dakota	no law
Georgia	15세 이하	Ohio	no law
Hawaii	15세 이하	Oklahoma	no law
Idaho	no law	Oregon	15세 이하
Illinois	no law	Pennsylvania	11세 이하
Indiana	no law	Rhode Island	15세 이하
Iowa	no law	South Carolina	no law
Kansas	no law	South Dakota	no law
Kentucky	no law	Tennessee	15세 이하
Louisiana	11세 이하	Texas	no law
Maine	15세 이하	Utah	no law
Maryland	15세 이하	Vermont	no law
Massachusetts	16세 이하	Virginia	no law
Michigan	no law	Washington	no law
Minnesota	no law	West Virginia	14세 이하
Mississippi	no law	Wisconsin	no law
		Wyoming	no law

<출처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 o 익사사고

- 미국에서 익사는 1~4세 어린이의 부상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19세 이하 의도하지 않은 어린이의 부상 관련 사망’의 세 번째 주요 원인임.

\* 2018년에는 19세 미만 어린이 (익사) 918명, (응급실) 7,000명 이상

- 안전법에 수영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보장치와 자동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며, 보트를 이용할 경우 개인보호장비(PFD)를 착용토록 제정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는 안전지침을 자발적으로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일부 주는 주거지내에서의 수영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법률로 명시.

#### o 화재(화상)사고

- 조지아주 등 많은 주에서는 소방법을 제정하여 연기감지기 설치와 방염처리가 된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화재정보기를 법적으로 의무화

#### o 낙상사고

- 어린이 보행기와 건축물 규정의 관련성(문턱, 문 넓이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 놀이기구 제작에 관한 기준을 제정(ASTM, CPSC)
- 미국재료시험협회에서는 화재시 대피 시설을 가진 저층의 아파트와 단독 주택을 위한 낙상방지용 창살에 대한 새로운 안전 기준을 제정

※ 뉴욕시는 낙상 방지용 창살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 / 2년간 사망률이 35%나 감소

#### o 놀이기구/용품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ASRM(미국 생식의학회), CFA(미국소비자연방)에서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는 재킷이나 스웨트와 같은 겉옷의 끈(목·허리)으로 인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지침을 제시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어린이 놀이터 안전기준 'Handbook for the Public Playground Safety'를 발간하였고, 1993년 미국시험재료협회(ASTM)에서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Safety Performance Specification for Public Use'를 발간함.

놀이시설 바닥처리에 관한 안전기준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제시하고, 놀이기구 자체의 안전기준은 미국시험재료협회에서 제시

- (연방위험물질에 관한 법) 납성분이 위험수준 함유된 장난감이나 어린이용품 생산 금지
- (어린이 안전보호법) 3~6세 어린이를 대상 제조된 풍선, 구슬,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장난감에는 경고문(질식 위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미국시험재료협회의 장난감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안전설명서의 기준에 맞게 스스로 장난감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고 장난감충은 진짜 충과 구별하기 위하여 화기안전규제법에 의한 표시요구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o 중독사고

- 중독 예방 포장법(1970)에서 30종의 가정용 세척제 및 의약품 등은 아이들이 개봉하기 어려운 포장법을 요구하고, 1992년 주거용 납성분 페인트 위험 축소법(Residential Lead-Based Paint Hazard Reduction Act)을 통해 납성분의 사용을 제한중이며,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내 탐지기의 설치를 일부 주에서는 법으로 제정

- 2001년 10월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는 최소한 10%의 탄화수소를 포함하고 농도가 묽거나 유질이 함유된 화장품과 가정용품에 대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포장용기를 사용토록 규정

※ 1970년부터 이미 시행중인 의약품 이외 자외선차단제와 가정용세척제(30종), 베이비 오일, 세안제, 손톱 에나멜 건조기, 색조화장전용, 마사지오일, 기타 모발, 바디, 목욕용 오일, 금속제품 클리너, 얼룩제거제 등 어린이가 마시면 폐로 물질이 들어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폐렴과 같은 질병 초래할 수 있는 품목 추가

- 집안에 화학제품이나 위험한 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불박이장 설치 권장

## o 실내 안전사고

- 가정과 유치원 등에서의 실내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Stepping Stones to Using Caring for Our Children’ 에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제시

## o 안전교육

- 아동복지 시설과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한 기금을 연방 모자보건국(Maternal and Child Health Bureau)에서 확보하여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준’ (980개/1993년)을 마련하였고, 4년 후인 1997년에 치명적인 상해에 대한 기준 (180개)을 교사와 교육기관에 제시.
-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안전에 대한 대통령 위원회가 1946년에 설치되어 ‘대통령 교통안전 실행계획’ 이 수립되어 학교의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과 교육계획 수립, 초·중등학교의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시행
- 대부분 초·중학교에서 각 주별 차이는 있지만 교통안전교육을 법적 의무화 하고 있음
- 미취학 어린이의 안전교육은 미국자동차연맹과 전미안전협회 등이 앞장서서 운영하는 안전클럽을 통해 보호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보급에 노력 중.
-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보행자 및 동승자 또는 승객, 자전거 이용자 안전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
- ※ 각 주마다 유아교육기관의 안전을 위하여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인가규정(Licensing Regulation) 이 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 유아교육기관의 시설, 설비의 안전, 물리적인 환경의 안전, 위험물 취급안전, 실내외 환경의 안전, 교사의 안전능력까지도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처치와 CPR(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교사를 1명 이상은 유아교육 기관에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중학교에서는 자전거와 이륜차에 대한 안전지도와 예비 운전자교육, 자동차 이용에 관한 개인의 책임, 교통 안전 법규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운전자 중심의 안전 교육을 실시



## ○ 안전문화

-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각 주의 정부, 해당 산업 관련 기관(기업단체 및 협회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대표적인 예로 풀뿌리 안전문화(Grossroot safety leadership)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안전동아리(Safety circle)의 개념에 근거하여 전통적인 안전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나타난 전략임.  
풀뿌리 안전 문화 운동은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개념이라는 추상적인 접근보다는 실증적으로 쉽게 접근하여 타당성이 있는 실천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추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확산시키고 전문적인 연구 기관에서 안전문화 정착의 기초를 제공함.
- 모자보건국은 건강한 아동보육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어린이보육을 위한 자원 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음.

## ○ 온라인 활동 보호

- 미의회는 인터넷에서 어린이가 음란물이나 유해한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2000년에 아동 인터넷 보호법(CIPA)을 제정
  - \* 법에서 인터넷 접속망이나 내부 연결망에 대해 할인을 받고 있는 학교나 도서관에 특정한 요구 조건을 부여
- 아동 인터넷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나 도서관은 인터넷 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만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 보호 조치는, (a) 음란물, (b) 아동 포르노그래피 또는 (c) 미성년자에 유해한 상품(미성년자가 접속하는 컴퓨터)의 사진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여과하여야 하며 인터넷 안전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 학교와 도서관 측은 합리적인 고지를 제공하고 최소 한 번 이상 해당 제안을 설명하는 공청회 또는 회의 개최 필요
- 아동 인터넷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1) 인터넷 안전 정책에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 절차를 포함해야 하며, 2) 21세기 아이들을 지키는 법안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미성년자에게 소셜 네트워킹 웹 사이트와 채팅 룸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 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법 등 온라인에서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
-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은 온라인에서 자녀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개인정보를 보호 함
- 이 법에 따라 위원회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13세 미만 어린이로부터 고의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상업용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규정을 공포해야 함.

- ①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Privacy Policy 제공
  - ②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 부모에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고지
  - ③ FTC COPPA Rule에서 허용하는 방법에 따른 유효한 부모 동의 획득
  - ④ 아동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접근권 등 아동 개인정보 관련 부모 권리 보장
  - ⑤ 수집한 아동 개인정보의 기밀성, 보안성, 무결성을 보장하고, 이를 보장하는 제3자에게만 개인정보 제공
  - ⑥ 수집한 아동의 개인정보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만 보관하며, 파기 시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나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단으로 파기
- 적극적인 업계 자율 규제를 장려하기 위해 이 법에는 업계 그룹 및 기타 단체가 참여 웹사이트의 규칙 준수를 관리하기 위한 자율 규제 지침에 대한 위원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책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 □ 어린이 안전 선진사례 : 통학 안전

### ○ 스쿨버스

- 미국에서 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해 가장 대표적인 노력으로 안전하게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미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스쿨버스에 관해 일반 차량과 구분되는 별도의 설계와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실행 중이다. 여기서의 스쿨버스는 유·초·중등학교의 스쿨버스를 의미하며, 통학 안전 관련 규정 역시 유·초·중등학교 모두가 포함된다. 한국에서의 어린이 보호구역 등 통학 안전에 관한 규정이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중점을 두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의 통학 안전 관련 규정의 대상 범위는 고등학교까지로 한국보다 범위가 넓다.
- 미국의 모든 주는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통학 교통수단과 관련한 안전 방안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한다. 스쿨버스는 설계 규정에 따라 반드시 눈에 잘 띄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정지 표시등(stop-sign arms), 적색점멸등(flash red lights), 전후좌우 사방을 관찰할 수 있는 크로스뷰 미러(cross-view mirrors), 전복 방지 장치(rollover protection), 어린이 보호 좌석(protective seats)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지침 17조 학생통학안전(Highway safety program guideline No.17: Pupil Transportation Safety)’는 스쿨버스의 외관과 범퍼의 색상, 제조 시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교통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미국의 모든 여객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야하지만, 스쿨버스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한다. 대형 스쿨버스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학생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경우의 충돌 상황에서도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버스 내 좌석 간의 간격을 좁게 설계되어 있으며, 충돌 시 충격 흡수가 가능한 소재로 좌석을 제작해야 한다. 또한 중량 10,000파운드(약 4.5톤) 이하의 소형 스쿨버스에는 반드시 어깨를 감쌀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벨트를 장착해야 한다.

- 도로 등에서 스쿨버스를 마주치는 차량에 관한 법 또한 매우 엄격하다. 스쿨버스가 정차하여 학생을 태우거나 내리는 동안, 주변 차량은 스쿨버스를 추월해서는 안된다.(법적으로 금지). 또한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스쿨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법 차량에 대해 벌금 및 면허 정지 등의 엄격한 처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 0 통학 담당 인력 관련 규정

- 도로교통안전지침 17조(학생통학안전)에서는 스쿨버스 운전자 등의 인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 역시 제시하고 있다. 각 주정부는 해당 지침에 따라 반드시 학생의 통학과 관련된 인력 운영에 관한 선발과 훈련, 감독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에 명시된 스쿨버스 운전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운전자 포함 16인 이상 규모의 여객 차량 운전 면허증을 갖춘 자
- ② 약물/알코올 오남용 규정 등과 관련한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조건을 충족한 자
- ③ 연방 여객자동차안전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의 상용(영업용)운전면허 기준(49 CFR 383-Commercial driver's license standards: requirements and penalties)에 제시된 신체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

#### 0 통학 안전 교육 관련 규정

- 연방 정부 차원에서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학생 통학 관련 인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기초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 통학 관련 행정가와 감독자, 스쿨버스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스쿨버스 아동안전장치 이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학생 통학 관련 업무 담당 인력들에게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권고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문서 뿐만아니라 유튜브 등의 영상 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 미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스쿨버스 운전자 안전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이 아닌 경력직 스쿨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해당 교육은 운전자의 자세, 위기상황, 학생 승하차 관련 사항, 경로, 학생 요구에 대한 대응 훈련, 학생 관리, 차량 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교통안전국 관련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학부모와 학생 등 스쿨버스를 이용자 대한 교육 지침 역시 마련되어 있다. 학부모는 자녀에게 스쿨버스 안전 수칙을 교육해야 한다. 해당 내용에는 스쿨버스 승하차 시 주의사항, 스쿨버스가 주변에 있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스쿨버스 운행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미국 조지아주 어린이 안전 관련 제도 및 규정

### ◆ <핸즈프리 법> 2018. 7. 1 시행

모든 운전자는

- (1) 전자 통신기기를 들고 있으면 안됨
- (2) 어플을 통한 라디오 청취 금지
- (3) 문자메시지 작성, 전송, 읽기 금지(음성으로 메시지 작성하는 경우 제외)
- (4) 네비게이션 외의 동영상 시청 금지
- (5) 동영상 촬영 금지

<벌금>

최초 적발시 \$50(벌점 1점). 2회 적발시 \$100(벌점2점). 3회 적발시 \$150(벌점 3점)

### ◆ <횡단보도법>

1995년에 조지아 주의회는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단순히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를 위해 **"정지하고 정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횡단보도법을 변경.

- (1)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의 절반에 있거나 보행자가 접근하고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 내에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정지하고 정지 상태를 유지.
- (2)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비집고 지나가거나, 보행자를 가로막는 것은 공간이 있더라도 불법.
- (3)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차량이 표시된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의 표시가 없는 횡단보도에 정차할 때마다 후방에서 접근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정지된 차량을 추월하거나 추월해서는 안 됨.
- (4) 운전자는 운전할 때 항상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

### ◆ <자전거 이용자에게 대한 법>

대부분의 주와 마찬가지로 조지아에서도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량".

- (1) 16세 미만의 사람은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고속도로,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 또는 주 또는 지방 정치적 하위 구역의 관할하에 있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거나 승객이 될 수 없음
- (2) 이 항목의 목적상 "자전거 헬멧"이란 미국 국립 표준 협회(ANSI) 또는 스넬 기념 재단에서 정한 자전거 헬멧의 충격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보호 헤드 기어를 의미.
- (3) 이 조의 목적상 자전거 헬멧의 끈으로 착용감이 좋은 자전거 헬멧을 사람의 머리에 단단히 고정한 경우에만 자전거 헬멧을 착용한 것으로 간주
- (4) 보호용 자전거 헬멧이 부착되지 않은 자전거는 대여 또는 대여 당시 자전거 헬멧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면 만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대여 불가

<처벌>

§ 40-6-298. (a) 누구든지 이 부분에서 요구되는 어떤 행위도 금지되거나 수행하지 않는 것은 경범죄. (b)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는 이러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이 부분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알면서도 허용해서는 안 됨.

40-6-299. 공공 안전 위원회는 이 부분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공포할 권한이 있으며 자전거에 추가로 요구되는 안전 장비나 표준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음.



### ◆ <안전벨트법>

승용차에 탑승한 8세 이상의 각 미성년자는 해당 승용차가 이 주의 공공 도로, 거리 또는 고속도로에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208에 따라 승인된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 함

- (1) 8세 이상의 미성년 승객이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는 미성년자에게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게 되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5.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벌금을 부과하는 법원은 미성년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사건에 대한 법원 처분 기록을 운전자 서비스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 (2) 해당 승용차가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208에 따라 승인된 안전 벨트를 통해 이 주의 공공 도로, 거리 또는 고속도로에서 운행되는 동안, 해당 승용차는 각각 8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적용 됨. 8세 이상의 미성년자 승객이 본 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승용차 운전자는 미성년자에게 안전 벨트를 미확보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야 하며, 유죄 판결 시 25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벌금을 부과하는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안전 벨트를 미확보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분 기록을 운전자 서비스부에 전달
- (3) § 40-8-76. 장비로 필요한 안전벨트; 4세 이하 어린이용 안전장치  
모든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 중이거나 해당 주의 공공 도로, 거리 또는 고속도로에서 운행되는 동안 해당 어린이의 키와 몸무게에 적합하고 1983년 1월 1일 또는 제조 시에 발효되는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213)의 규정에 따라 미국 교통부가 승인한 어린이 승객 보호 시스템에 적절하게 관리
- (4) 위반 행위가 최초로 유죄로 인정되면 5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행위가 두 번째로 또는 이후에 유죄로 인정되면, 100달러 이하의 벌금

### ◆ <스쿨버스>



모든 운전자는 표시등이 깜빡이고 학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지된 스쿨버스가 있으면 양방향의 모든 자동차는 정지해야 함. 버스 전면과 후면에 깜빡이는 빨간색 또는 황색 표시등을 통해 사전에 경고를 하며, 버스가 다시 운행을 시작하거나 경고 신호를 비활성화하고 승하차하는 모든 학생이 도로를 통과할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함

벌금과 처벌 : 의무적 법정 출석/ 약 \$1,000 벌금 / 6점 벌점 등



## 2) 스웨덴

### □ 주관부서

- 상품안전법과 시장법에서 소비자안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은 소비자옴부즈맨과 소비자정책원과의 의해 준수상황이 감독되고 있으며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점의 판단은 특수법정인 시장재판소가 담당하고 있음
- 소비자정책국(The National Board for Consumer Policies : KOV)은 장난감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규정만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상품안전법)의 규정 이행을 감독하고 있으며, 표준연구소(SIS)에서는 유럽의 표준과 일치하는 장난감의 안전규정과 운동장 시설에 관한 표준을 결정하고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음.
- 화학검사소는 화학품에 대한 보건문제와 환경위험을 책임지고 있으며, 주택건축기획국은 건축물에 관한 필요조건과 건축방식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관장
- 건강복지부는 아동교육시설과 아동레저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규범을 마련하고 있음.
- 도로안전국은 교통안전문제를 조정하며, 산업기술개발국은 전기안전문제를 담당하고 보건사회부에 있는 국립아동환경협회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안전과 놀이의 관점에서 어린이 환경개선 업무를 하는 등 어린이에 대한 안전업무를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임.

### □ 어린이 안전제도

- 아동 생활환경과 제품에 대한 위험에 관한 법을 제정
- 건축설계법에는 어린이가 생활하는 건물에 “어린이안전 필요조건” 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아교육기관, 학교,보육시설, 아동도서관, 아동레저센터 등 주택과 비슷한 공간은 동 법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음.
  - 공공건강법에 건축 관련법의 이행에 대한 감독을 위해 환경관리국은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 학교, 아동레저시설의 건물 대지와 환경을 위한 특별한 감독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상품안전법에서는 리콜, 위해 제품의 판매금지, 주의경고사항, 위해제품 수출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
- 아동의 교육시설과 레저시설의 안전에 관한 규범에는 실내·외 시설, 물리적인 환경의 안전, 설비의 안전, 건물과 대지의 안전 등을 제시하고 있고 어린이용 가구, 장난감, 놀이터, 어린이 보호 제품, 물에서 사용하는 장비, 헬멧 등의 안전

에 대한 규격화를 하고 있음.

#### ○ 승용물 안전사고

-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 뇌손상 예방을 위해 헬멧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동차안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6세미만의 어린이는 아동용시트, 영아용캐리어, 벨트 좌석 이나 벨트쿠션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과 학교수송법 도로안전국의 규정 등에 어린이의 학교 통학 안전을 위하여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고, 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특수 보호장비를 갖추도록 규정.
- 자전거를 탈 때는 바퀴살 보호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뒤꿈치와 발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이 있어야 함. 다만 헬멧 착용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있음.
- 유모차는 어린이가 찢릴 수 있는 뽀족한 부분 없어야 하며, 바퀴와 브레이크는 꼭 조여있어야 하고 실수로 접히지 않도록 안전정지장치나 잠금장치가 있어야 함.

#### ○ 질식사고

- 소비자정책원에서는 어린이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침대나 아동용품이 안전 지침상의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음.
- 악기나 호루라기 등에는 목에 걸릴 수 있는 부품은 안되며, 음식모형 장난감은 목에 걸리도록 해서는 안 됨.
- 영아용 침대나 유아차에 끼여 질식사고가 나서는 안되고 유모차 위의 신축성 있는 끈은 75cm이상을 넘기면 안되며, 머리가 끼이지 못하도록 고리의 지름이 35cm 이상이어야 함.
- 냉장고, 사우나실에서의 잠금사고 방지를 위해 문을 안에서도 열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 중독사고

- 의약품은 독극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들이 만질 수 없도록 특정한 캐비닛 이나 선반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에 해로운 세제와 같은 화학물질 은 별도 높은 곳에 보관하여야 함.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물질은 안전잠금장치가 있을 때만 싱크대 아래 보관 가능
  - 가정용화학약품의 경우 뚜껑을 누르면서 동시에 돌려야 열릴 수 있어야 하며 가루로 된 주방용세제의 경우는 4세 이하 어린이가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가 있어야 함. 주의 경고\*를 표시토록 안전지침에 규정
- \* “부식성이 있으므로 아동에게 주의”, “삼키면 위험하므로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o 화재/화상사고

- 요리기구는 아이들이 뜨거운 철판이나 오븐에 손이 닿을 수 없도록 설계하거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뜨거운 물에 의한 손상위험이 있는 경우 물의 온도는 38℃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콘센트가 바닥에서 적어도 1.7m 위에 설치하거나 아이가 금속물체를 꽂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o 낙상사고

- 지면에서 1.8m 높이 미만의 개폐가 가능한 창문은 추락(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아동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나 잠금장치, 다른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함.

#### o 실내 안전사고

- 문으로 혼동될 수 있는 유리 표면은 유리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하고 놀이방이나 교실에 있는 문과 현관문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단단한 플라스틱 유리를 사용하여야 함.

#### o 놀이기구/용품

- 장난감구조에 대한 안전지침(유럽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위험한 장난감은 판매 불가 및 경고문 부착, 결함제품의 리콜, 판매금지 조항이 있음.
- 금속 재질의 장난감 화살은 판매가 불가하고 권총이나 대포를 이용하여 발사하는 화살은 끝이 뾰족하지 않아야 하고 보호캡이 있어야 하며, 강하게 발사되면 안됨.
- 고무줄 새총과 상업용 장난감 고무총은 판매 금지되고 있음
- 인형 유모차와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하며, 타는 장난감은 전복되지 않도록 안정되게 제작해야 함

#### o 익사사고

- 수로나 어린이 물 놀이터의 수심이 20cm를 넘으면 뚜껑(25 kg 이상)이나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함.
- 수영장은 울타리(최소 90cm높이)가 있어야 하며, 울타리 밑으로 어린이들이 기어 갈 수 없도록 땅 지면에 맞닿아 있어야 함.

#### o 학교안전

- 작업환경법 및 공공건강법에서는 학교 내 안전을 위하여 수업에 사용되는 학교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업과정에 학교환경은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개발 규정을 명시.



- 캠프장소, 목욕장소, 경기장이나 운동장 또는 비슷한 시설에 적절한 규칙을 경찰에게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스포츠연맹 자체에서도 스스로 안전규칙을 만들고 있음(헬멧, 물과 얼음, 스키, 승마 등)
- 곤봉, 칼, 못 박힌 병기 등 위험한 물건을 어린이가 갖는 것은 허락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학교법령, 아동보호서비스, 교육과정 등에서 사람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공존 규칙이 있음.
- 아동교육시설과 아동레저시설의 안전에 관한 규범을 1989년에 마련하여 실내와 실외의 시설, 물리적인 환경의 안전, 건물과 대지의 안전, 설비의 안전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 o 안전교육

- 국립도로 안전협회에서 자녀가 3세만 되면 엄마와 자녀가 함께 퍼즐과 스티커를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각 가정으로 보내주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음.
- 어린이 연령별(3~4세용, 5~7세용)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가정으로 보급중이며 연 20시간씩(초급, 중급, 상급) 초등학교에서도 법적으로 교통안전 교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o 안전문화

- 소아과 의사가 1954년 스웨덴의학협회의 소아과 부서와 적십자를 통하여 어린이 안전 캠페인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위원회를 위한 협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회원, 관계이익단체, 시민운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예방활동을 추진
- 소비자정책원, 어린이환경협의회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가장 중요한 법률의 제정과 사회적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에도 주력

### III. 결 론

#### 1. 정책시사점

##### □ 어린이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 <미국>

- 1998년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하고 13세 미만의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부모에게 이를 직접 알리고, 동의자가 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국정연설에서 빅테크 회사들의 아동에 관한 정보 수집과 광고를 더욱 제한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했으며, 이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 「아동·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연방의회 발의로 이어졌다.
-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 연령적합 설계 규약법(CAADCA)」을 2022년에 제정하여 2024년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미성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는 등의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 <한국>

- 우리나라는 올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와 이해하기 쉬운 양식으로 대상 아동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 그러나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진다. 이에 학교 앞에서 중·고등 학생의 개인정보를 판촉행사로 수집해 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 \* 일부 화장품 가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적은 사람만 상품을 나누어 줌.
- 온라인에서도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이유로 18세 미만의 이용자들에게 회원가입시 생년월일을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 : 2019년부터 회원가입시 요구/ 2021년부터 기 가입자에게도 요구

\*\* 구글(유튜브) : 만13세 이상임을 확인 및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추가적 보호 기능 설정 이유

## <시사점>

- 온라인에서의 미성년자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연령의 확대 검토가 필요

## □ 어린이 통학 안전제도 강화(통학차량 및 교통 법규 등)

### <미국>

- 연방 정부 차원에서 통학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 특징을 살펴보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 통학 관련 규정의 대상 범위를 매우 폭넓게 설정하고 있다.
- 또한, 미국은 스쿨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므로 통학 안전에 관한 규정은 스쿨버스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스쿨버스를 오래 운영해왔기에 대부분 사람이 스쿨버스가 가장 안전한 통학 방안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있으며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통학 시 다른 방법보다 스쿨버스 이용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홍보하고 있다.
  - \* 통학 중 사고 위험이 일반 개인 차량을 이용할 때보다 스쿨버스를 이용하면 약 70배 더 적다는 통계자료를 포함
- 그리고 안전 교육을 중요시하여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특히 스쿨버스 운전자에게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초기 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안전 교육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여 연방 정부 뿐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스쿨버스 운전자를 비롯한 통학 담당 인력에 대하여 특정 시기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을 의무화 또는 권장하고 있다.
  - \* 도로 교통 및 학생 안전은 일회성 단기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장기간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 <한국>

-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 및 일부 기초지자체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생 통학 지원조례로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법에서 교육감의 책무에 학생통학 지원을 포함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규모가 정해짐. 또한 학생통학버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음.

[경기도교육청 학생통학 차량 지원 현황(2022년)]

시 군 명	대상 학교수 (개)	운행 차량수 (대)	운행 차종	지원금(천원)		
				총사업비	지자체	교육청
전 체	52	92	대형, 중형, 소형	4,484,120	2,223,860	2,260,260
과 천	1	3	대형	135,000	67,500	67,500
광 명	1	4	중형	134,400	105,000	29,400
의 정 부	1	1	대형, 중형	34,220	17,110	17,110
광 주	9	19	대형, 중형	919,804	459,902	459,902
시 흥	1	3	중형	169,632	84,816	84,816
양 평	1	1	대형, 중형, 소형	40,000	12,000	28,000
용 인	19	37	중형	1,965,840	982,920	982,920
이 천	10	14	대형, 중형, 소형	619,000	309,500	309,500
평 택	3	4	중형	226,224	113,112	113,112
포 천	6	6	중형	240,000	72,000	168,000

자료 : "학교설립기획과 경기도 학생통학 지원 현황", 경기도 교육청 내부자료 재작성(2022).

- o 교육청과 별도로 광역 차원에서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교육청 사업과의 연계가 부족

[경기도 학생통학 지원 관련 타 교통 지원사업 현황]

구 분	경기도 학생통학마을버스 운영	경기도 맞춤형버스 지원사업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만 13~23세)
사업목적	학생통학마을버스 : 학교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유치원생,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 제한된 범위의 여객을 운송하는 마을버스	산업단지 등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요일·시간대별 수요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목적 버스서비스 제공	'19년 버스요금 인상으로 교통비가 증가한 경기도 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사 업 비	비 예 산	6,192백만원 (도 3,096/시군 3,096)	31,423백만원 (도비70%, 시군비 30%)
운영현황	도내 11개 시군, 412대, 1,694개 노선이 운행 중 노선체계 : 유치원, 학교, 학원 수요에 맞춰 5~7개 노선 운영(토, 일 휴무) 요금체계 : 1개월 단위 계약 요금(교통카드×, 환승할인×)	17개 시군, 100개 노선 (76대) 운행 중 노선체계 : 요일·시간대별 수요 및 지역특성 반영한 맞춤형노선(한정면허) 요금체계 :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통합환승할인적용) 재정지원 : 운행손실금 지원(예산범위 내) 차종 : 중·소형 승합자동차	지원대상 : 주민등록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중 대중교통이용자 지원수단 :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와의 환승 통행지원 사업규모 : 약 43만명(도내 전체 161만명의 약 26%) 지원금액 : 연 12만원 한도

자료 : 경기도 버스정책과 내부자료 재구성(2022).

## <시사점>

- 미국과 같이 통학 지원 대상을 모든학생인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규정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거주지에 따라 통학 지원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방안 마련(사례 - 무상 급식)이 필요하며 통학버스 운전자와 학교 담당자 등 안전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필요

## □ 어린이 안전 교육의 실효성 확보

### <미국>

- 미국은 주별로 교육과정이 다르지만, 대부분 주에서 안전 교육을 포함한 보건 교과를 모든 학년에서 가르치도록 했다.
- 조지아주는 ‘조지아 보건교육을 위한 성능 표준’에 유치원부터 모든 학년까지 보건을 포함한 안전교육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사용 △부상 및 폭력(자살 포함), △담배 사용, △영양 결핍, △부적절한 신체 활동 △위험한 성적 행동으로 나누고 학년별로 배워야 하는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나이가 어리고 저학년일수록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을 받게 된다. 유치원과 초등저학년 아이들은 제일 먼저 위급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운다. 아이들에게 사이렌 소리와 소방차나 구급차의 불빛이 의미를 설명해 준다.
- 학교에 침입자가 들어왔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 탈출로를 그린 포스터를 걸어 두고 정기적으로 교사가 아이들에게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놀이를 이용한 안전 교육\*에 중점을 뒀다.

\* 운동장에 횡단보도를 그려 교사의 ‘빨간불’ ‘파란불’ 신호에 따라 아이들이 건너고 멈추는 활동을 통한 교육

### <한국>

- 안전 교육을 연 51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세부적인 교과목과 이수시간은 교육부의 고시로 정하고 있다
- 교통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최고 이수 시간은 연 11시간 이내로 실질적인 교육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전적으로 학교와 교사들에게 의존하고 있음. 교육의 내용도 학교별로 운영하여 천차만별임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교육 시간	유치원	13	10	8	10	6	2	2
	초등학교	12	11	8	10	6	2	2
	중학교	10	10	10	10	6	3	2
	고등학교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 <시사점>

- 안전교육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린 나이에서부터 교육을 받아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므로 연간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내용도 실질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체험위주로 구성하고, 체험관이나 민간 안전교육 기관 확대를 통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또한, 교사나 관련자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 신설 및 이수, 자격증 도입 등도 검토가 필요함.

## 2. 정책 제언

### □ 어린이 통학 안전 등을 위한 미국의 “정지 표지판” 도입 검토

- 미국은 대부분 학교앞이나 교차로 등에 신호등 대신 정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음

\* 차량을 3초 정도 확실하게 정차한 후 주변 차량과 보행자를 확인한 후에 진입

	<p>① 정지 신호가 있으면</p> <p>② 다른 차량이 없더라도</p> <p>③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p>	
-------------------------------------------------------------------------------------	---------------------------------------------------------------	--------------------------------------------------------------------------------------

## - 통행 사례



i) STOP SIGN에서 정지후 출발순서는 먼저 STOP LINE 앞에 정지한 차량에 있다.

ii) 만약 1, 2, 3, 4번 차례로 정지선에 멈추었다면 1, 2, 3, 4번의 순서대로 출발하면 된다.

iii) 출발 시점은 선행차량이 교차로에서 벗어날 때

- o 학교앞, 아파트 단지내에 “정지 표지판” 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 감속을 통한 사고예방 및 신호등 대체를 통해 설치 비용 및 유지비용(전기료 등)의 절감을 기대 할 수 있음.
- o 향후 통행량이 적어 야간에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운영하는 지방의 소도로 등에도 도입 가능

### □ 전국적인 통학버스 운영 체계 마련

- o 미국의 사례를 통해 일반차량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보다 통학버스를 이용한 학생의 사고 안전도가 높은 것을 고려하면, 고등학생까지 통학버스 운영의 확대가 필요함.
- o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지방비 매칭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통학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청과 광역간 별도로 운영되는 유사 통학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 필요
- o 또한, 출퇴근시간 시 교통 혼잡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수업시간을 초 · 중 · 고등학교별로 운영 필요(예 - 초등학교 7시 30분, 중학교 8시, 고등학교 8시30분)
- o 다만, 수업시간 조정을 위한 사회적인 합의 도출 및 방과 후 학생 보호 등에 대책 필요

### □ 교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 o 미국은 개별 법령으로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자동차보다 사람 우선의 교통 문화가 정착되어 있음



- o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와 운전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지속해서 교통사고가 발생
- o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전환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의 활동 필요

## 《 참고문헌 》

- ▷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 관계부처 합동)
- ▷ 보육시설 안전사고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 경기 어린이집을 중심으로(김혜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7)
- ▷ 선진국의 어린이 안전 정책
- ▷ 부모 안전교육자료 개발 : 가정내 안전을 중심으로( 서문희; 최은진; 박희정; 장시원, 2004)
- ▷ 영유아 보육시설 안전사고 실태 및 종사자 인식 연구 : 서울시 강북구 국·공립 민간(사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이순영,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2010)
- ▷ 소비자보호법 개정 방안 : 소비자주권 신장을 위한 정책제언(박영선, 2004)
- ▷ 소비자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 I : 어린이 안전(지광석, 김재영, 이승진, 2019.01.14.)
- ▷ 어린이 안전 기본계획 (2차) 수립 연구용역(백수정, 2018)
-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청 홈페이지
- ▷ 어린이 안전 관련 언론보도 등